

'비주류' 취급 받던 SNS, 사회개혁 '잔다르크'로 부상

(사회관계망서비스)

미투 운동, SNS 통해 빠르게 확산
남북단일팀 구성 분노 표출 도구로
실시간검색어 운동으로 항의하기도
확증편향·포퓰리즘 등 한계도 있어

과거 '변방'이나 '비주류' 취급을 받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이 사회개혁의 '잔다르크(백년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투 열풍, 평창 단일팀 논란, 비트코인 규제 반대 운동 뒤에는 SNS 즉 1인 미디어가 있었다. 소셜 미디어가 전통 언론을 넘어선 것은 옛말이 되버렸다.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45.5%가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미디어 수용자에서 벗어나 2200만 개의 1인 미디어가 되어 직접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만들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약자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소셜 미디어의 순기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 만 믿는 '확증편향'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투 운동, 국민의 88.6%가 지지

"아제라도 이 이야기를 해서 용기를 낸 분들께 힘을 보태는 것이 내가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윤택 연출가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글을 'metoo(미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번진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강력한 지지를 만들어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9~22일 전국 성인 남녀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 ±3.0%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88.6%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투 운동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63.5%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일시적 유행처럼 지나갈 것 같다'라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27%p 높은 수치다. 현재 미투 운동은 SNS상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어 가며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남북단일팀 분노...文 지지율 50%대로 추락

지난달 17일 정부가 북한과 여자아이스 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SNS상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유튜브에는 6500개가 넘는 '김정은 화형식' 영상이 올라왔고, 누적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다.

남북 단일팀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의 모 사립대학교 '대나무숲(의명 페이스북)'에는 "해당 팀 선수들과 일절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합의로 단일팀이 구성된 것에 대해 화가 난다. 이것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사람들은 직접 SNS에 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소셜 미디어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가 1월 4주 차 전국 성인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2.5%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59.8%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총선때보자"

SNS 여론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위력을 과시했다.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투자자(코이너)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거래소 폐쇄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들어 냈다.

코이너들은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SNS에 공유

하며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냈다. 정부는 소셜 미디어 여론이 악화되자 나흘 만에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과 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같은 달 31 일에는 네이버 비트코인카페에서 한 회

원의 주동 하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총선때보자"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포퓰리즘 한계 극복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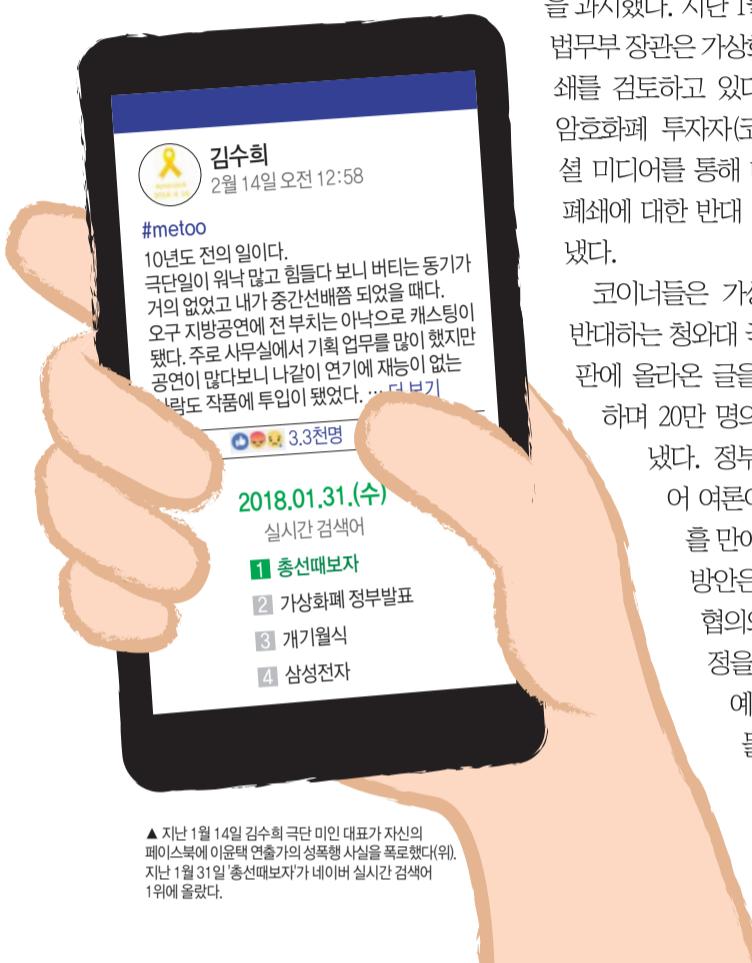
SNS, 1인 미디어가 기성 언론을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주요 언론사만이 갖고 있던 의제설정 권한이 소셜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미디어 수용자였던 사람들이 직접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신성호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과거 신문·방송 등 전통매체에 접근이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SNS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소셜 미디어가 가져온 사회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또 "뉴스 생산자의 관심 분야가 각자 달라 콘텐츠들이 매우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교수는 "1일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주장 혹은 비판의 경우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대중영합적(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며 소셜 미디어의 한계를 지적했다.

나은영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역시 "정확한 여론을 알기 위해서는 SNS상에서 '많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침묵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주는 미디어도 함께 이용함으로써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롯데월드타워 봄청소 대장정 시작

경찰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23층의 약 4만2천여장을 청소하는 데는 약 70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8시간 작업하는 것으로 가정해 날수로 환산하면 약 90일이 걸리는 대규모 청소 작업이다.

/연합뉴스

| 전남 소식 |

5·18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前 장관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5·18기념재단 이사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김영진 전 장관(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5선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으로,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세계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이사회는 김영진 신임 이사장의 이런 활동 경험과 함께 5·18진상규명 및 5·18 40주년 준비 등에 있어서 필요한 의견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으며, 현 상황에서 재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전남 광주=김남중 기자

가맹거래법 위반 '비비큐' 과징금 3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부담 비용 일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비비큐는 가맹점주(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

유·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을 평가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또한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비비큐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진도군 '국민신청실명제'로 사업 투명성 제고

진도군은 기존의 군정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정책 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군청 홈페이지 정책실명

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은 4월중 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된다.

단, 진도군 소관 사업이 아니거나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심의 위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해남읍 환경미화원

깨끗한 가게·골목 뽑는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들이 해남군의 깨끗한 가게와 깨끗한 골목을 선정한다.

해남읍은 올해 특수 시책으로 환경미화원이 뽑은 '깨끗한 가게·깨끗한 골목'을 선정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가게를 대상으로 매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모범 업소를 추천받아 분기별로 최다득표 가게를 선정한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